

불참 선언에 제명까지...5·18 기념행사 '반쪽' 우려

5·18행사위 대표자 회의, 부상자회·공로자회 징계 결정 부상자회 행사위 탈퇴...계엄군 '합동참배' 놓고 갈등 고조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행사위에서 탈퇴하기로 한 두 단체에 대해 14일 '제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법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대동세상을 내세운 오월정신에 흠집을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월단체를 비롯한 광주·전남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43주년 행사위는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전반기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에 대

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두 단체가 먼저 탈퇴를 선언했지만, 오월정신을 실추시키고 행사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행사위는 3건의 보고와 3건의 논의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두 공법단체에 대한 징계 건이었다. 행사위는 13일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다양한 의견이 나와 14일 전체대표자회의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대표자회의에선 참석자 한명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의결에 찬성했다.

행사위는 행사위 참가단체에서 두 단체를 제명하

기로 했고 두 단체장 또한 행사위원장단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행사위 운영규정에서도 두 단체를 삭제했다. 이번 징계는 두 단체가 자신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오월정신에 맞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일 때 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행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명된 두 공법단체(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은 이들 공법단체가 특전사동지회와 추진한 대국민공동선언에서 비롯됐다. 특전사대원들의 사죄도 없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속의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5·18민주주의를 참배하고 대국민 공동선언을 진행한 것이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오월 단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국민공동선언을 함께하기로 한 5·18유족회는 행사에서 빠졌다.

이에 187개의 광주·전남 지역시민단체는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단 대책위원회'를 꾸려 행사를

강행한 두 단체에 대해 사죄와 공동선언문 폐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5·18부상자회는 지난 13일 '법률적인 근거로 43주년 행사 주체 관련한 공법단체의 입장(통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사위에 보내고 행사위에서 스스로 탈퇴할 것을 알리고 행사위 해체까지 요청했다.

5·18부상자회는 법률적인 근거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누구든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안된다', '단체의 명칭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위는 43주년 5·18기념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에 기여하고 정전70주

년을 맞아 광주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모아 오월공동체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을 올해 행사의 방향으로 잡았다.

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의 총감독은 박정운 극단 토박이 상임 연출이 맡아 사업을 구성하기로 했다. 예전에 진행된 오월 풍물단·시민낭만·민주평화대행진은 그대로 진행된다. 코로나 정국에 열리지 않았던 국민대회가 다시 열리게 됐고 각종 시민 참여 사업들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5·18 당시 총을 들고 불에 항거했지만 사망 또는 부상당하지 않은 시민들은 공법단체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두 공법단체는 그들만이 5·18이라는 생각에 5·18을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5·18은 43년 동안 외부의 세력에 맞서 싸웠지만 이제는 내부에서 싸워야 하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안사서 매장지 시신 수거해 화장 했다던 이야기 들어”

5·18 계엄군 양심고백·증언 행사 진상조사위 조사 내용 '재탕' 지적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대국민 공동선언'을 한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의 양심고백·증언을 듣는 행사를 열었다. 다만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땡탕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4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오늘의 증언이 5·18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980년 당시 3공수여단 중사로 광주에서 진압 작전을 맡았던 김귀삼(68) 예비역 중사가 증언대에 섰다.

김 중사는 "내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역 앞에서 대검으로 누군가의 엉덩이를 찔렀는데, 그 피해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분이 살아 계시지 모르겠지만 꼭 만나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는 또 5·18 당시 버스에서 총격을 받아 다리를 다쳤던 김태수 5·18부상자회 중앙회 이사로 참석해 발표 명령자와 암매장 위치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중사는 "최초 발표명령자는 자제히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부대에서 명령 내린 건 여단장이 아닐까 추측한다"며 "저처럼 증언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발표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제대 이후 보안사 측에서 시신 매장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 보안사 측이 시신 위치를 알아내 전부 수거한 뒤 화장해서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암매장된 유공자와 실종자를 찾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종자 유해를 찾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으로서 시위 진압에 투입됐던 김귀삼 예비역 중사(왼쪽)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부상자회의 증언회에서 5·18 피해자 김태수씨에게 사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김 중사가 밝힌 내용은 모두 김 중사를 포함한 계엄군 증언을 바탕으로 진상조사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중사는 지난해 5월에도 진상조사위 주선으로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을 만나 사죄하고 양심고백을 한 적 있다. 당시 5·18민주화운동 첫 사망자인 고(故) 김정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5·18 투입 전경, 삼청교육대 동원 사실로

당시 경찰관 일기장서 확인

5·18민주화운동에 투입됐던 현역 전투경찰(전경)이 1980년 8월부터 계엄당국이 운영했던 '삼청교육대'에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980년 당시 전경으로 근무했던 경찰관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한 일기장을 통해 밝혀졌다.

5·18기록관은 지난달 17일 퇴직 경찰관 A(67)씨로부터 일기장을 기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초부터 1980년 말까지 광주경찰국 기동대 제2중대에서 복무하면서 틈틈이 일기를 써 왔다.

A씨는 1980년 8월 5일자 일기장에 "31사단 수용소로 파견나온 지 몇일(며칠)이 지났다"고 썼으며, 8일자에는 "벌써 이곳에 파견나온지 일주일 지났다", "약 4여명의 수련생들이 온종일 규칙된 일과표에 따라 기합과 훈련에 여념이 없다"고 기록했다. 5·18기록관은 이 내용이 A씨가 복무 도중 삼청교육대로 차출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가 전두환·신군부를 비판하

는 사람들을 불법 감금하고 갖은 가혹행위를 저질렀던 곳이다.

피해자 중에는 5·18 관련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5월 22일부터 전남도청 사수 활동을 했던 남마주이 100여명은 5월 27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 이후 모두 사라졌는데, 이들이 무더기로 삼청교육대에 연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5월 18-27일 일기에는 "계엄군에 잡힌 수많은 학생들은 비참하리 만큼 얻어맞고 체포됐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체포된 어느 남녀 2명이 계엄군의 구둣발에 채이며 끌려갔다", "오후 1시 시위대를 실은 차량이 경찰 저지선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집단 발표가 시작됐다"는 등 상황 묘사도 남아 있었다.

김홍길 5·18기록관 학예연구사는 "이 기록은 시민군도, 계엄군도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본 5·18 기록으로 가치가 있다"며 "5·18 이후 신군부가 어떻게 삼청교육대를 운영했는지, 5·18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구 조직문화 혁신 '감정존중 지킴이' 배치

광주시 남구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다음달부터 '감정존중 지킴이' 제도를 시행한다.

남구는 14일 "조직 구성원이 다양화되면서 인식 및 수용 수준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구청 내 각 부서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정존중 지킴이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남구 조직 내 감정존중 지킴이는 총 56명으로, 기존 세대와 마찰 발생 시 중간자적 위치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6급 팀장이 맡는다.

만약 업무 중 직장내 괴롭힘, 사소한 감정으로

인한 고민 등이 있을 때 갑사실 신고에 앞서 감정존중 지킴이가 중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광주 5개 구청 중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경남도청을 벤치마킹했다.

한편 남구는 올해 직장 내 갑질 근절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감정존중 지킴이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 갑질 실태조사, 매월 2차례 감정존중의 날 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